

여야, 내년 예산안 558조 합의...6년 만에 법정시한 지키다

재난지원금 3조원·백신 0.9조 반영...7.5조원 증액

내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코로나 극복대책 시급해”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3차 재난지원금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9000억원 등을 포함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슈퍼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이 순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6년 만에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안을 처리한다”며 이 같은 예산안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막판 협정을 조율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핵심 쟁점인 코로나19 재우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각각 3조원, 9000억원씩 반영키로 했다.

여기에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넷제로·Net Zero)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외 등에 필요한 예산까지 포함해 총 7조5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순증했다.

예산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3조6000억원+알파(α)의 3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4400만명분을 가정한 1조3000억원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서민주거대책, 탄소중립 이행 등 예년에 없던 4대 신규 소외 예산에 보육·보훈·돌봄·노인·장애인·농업 관련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 증액분을 더해 8조5000억원을 증액해야 한

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보다 큰 11조60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해 왔다.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비롯해 1조원의 코로나19 백신 예산, 초중고생 대상 돌봄지원금 20만원 지급, 보훈수당 인상 등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 감액 가능 규모는 5조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 가능 규모는 2조원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정 간 간극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여야는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늘리는 대신 증액 요구는 최소화함으로써 순증 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민주당 여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국민들의 힘든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감액을 하자는 여야의 공통 인식이 있었다”며 “감액을 최대한 해야 신규로 소요되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백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할 수 있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여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마지막 단계에서 가급적 추가적인 순증 없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

려고 애썼지만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감액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민생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예산안의 총량이 합의된 만큼 이날 오후부터 이를 반영한 세부사업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예산안 법정 시한인 오는 2일 오전 중으로 예산명세서(시트) 작업을 끝낸 뒤 여결위 등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보다 순증액된 2조2000억원의 재원은 상당 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세부 사업에 관해서 증감을 확정하면 채권 발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도 (감액된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인 작업이 끝나야 얼마 정도 국채를 발행할지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감액 규모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의 일부도 삭감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1조3000억원의 대폭 삭감을 통한 코로나19 예산 마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추 의원은 “그 부분(한국판 뉴딜)도 일정 부분 삭감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최종안이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엔 확보된 9000억원의 백신 관련 예산과 기존에 편성됐다가 집행되지 않고 남은 3000여억원의 예산을 더하면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최대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2020년 회계연도에 3591억원 정도의 코로나 백신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고 내년도 9000억

원을 반영한다는 것을 합산하면 1조3000억원 가량 된다”며 “그것은 향후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명의 국민들께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전망대로 선별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합의로 6년 만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됐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정 총리, ‘동반사퇴론’ 秋와 독대...尹에게도 메시지 전할 듯

전날 주례회동서 나온 ‘秋-尹 사퇴’ 맥락 설명한 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추미에 법무 장관과 독대했다. 정 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이어진 데 대한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한 추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5-10분간 대화를 했다. 배석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날 자리는 정 총리가 추 장관이 국무회의 전 일찍 도착하면 만나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윤 총장에 대한 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은 적어도 (정계 결과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이 어려우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추 장관에게 전날 문 대통령과 한 주례회동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추 장관 사퇴 제안’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는 윤 총장에게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데 대한 입면권자인 문 대통령의 반응과 의중을 당사자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관할의 검찰총장과 직접 연결돼 있지 않은데다가, 총리가 검찰총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아울러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열리고, 이르면 윤 총장이 추 장관에 대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3일 법무부 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흐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추미에 법무부 장관과 독대를 마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국무위원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법무부 장관을 통해 총장에게 이야기하도록 돼 있는데, 그 관례나 관행에 따를 것인지 등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하태경 “조국에 마음의 빛 있다는 文대통령이 선공후사? 우습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선공후사(先公後私)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조국한테 마음의 빛 있다는 대통령이 아니냐”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문 대통령이 검사들에게 ‘선공후사’를 주문했다. 조국한테 마음의 빛 있다는 분 입에서 선공후사 이야기가 나오니 우습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추미에 장관의 검찰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을 향한 우회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추미에 뒤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나오셔서 말하는 한마디가 선공후사”고 “검찰이 권력비리 수사에 나서니까 자기 비리 측근들 보호하려고 윤석열 처내려는 게 선공후사는 아니다. 정작 선공후사를 실천하는 건 일선 검사들이 아니냐”고 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전문팩스 062-946-0053